'99 국정지표
국정개혁의 강화
경제재건의 시작
국민화합의 실현
지식기반의 확충
문화관광의 진흥

국정신문

1999년 6월 7일(월)
주간 / 비매품

발행인 오홍근 발행처 국정홍보처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우)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21 / 전화 (02)3450-2255(편집) 3450-2276(구독) FAX 3450-2259

IMF극복 1년6개월

4대개혁 서둘러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

국가경쟁력 높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로 들어선지 1년 6개월만에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IMF 쇼크 첫해였던 지난해 혹독한 경기침체로 마이너스 5.8%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 올 1·4분기에는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간 5~6%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APEC투자박람회 인사 면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투자박람회에 참가한 윌버 로스 미 로스차일드 펀드 회장을 비롯해 외국 유수기업 최고경영자와 각료·학자·경제기구대표 등 9명을 면담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투자박람회는 지난해 11월말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 APEC총회에서 김 대통령의 제안으로 처음 열린 것이다.

가용외환보유고 사상 최고

IMF 긴급자금을 수혈받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한 합의서에 서명하던 97년 12월 3일 국민들은 6.25 전쟁 이후 가장 무거운 위기감을 느껴야 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던 98년 1월 내외신과의 회견을 통해 "1년 반 안에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시 외환수급이 촌각을 다투던 국가부도 위기 상황에서 김대통령의 약속은 충격적이었다. 기업 도산 속출과 물가 앙등 속에서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외국에서는 한국의 채권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환율은 달러당 800원선에서 1,964원까지 치솟고 금리는 30%를 웃돌았다.

외국의 경제 전문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은 최소한 4~5년이 걸릴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지표들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환율이 1,100원대에서 안정되고 회사채 수익률은 8.4%대로 IMF 이전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가용외환보유고는 지난 5월말 현재 574억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중이며 어음부도율은 96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벼랑 끝 경제 연 5~6% 성장 이끌어

이같은 성과는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기업·노동·공공 부문 등 4대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튼튼하게 하는데 총력을 쏟은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5대 원칙 아래 자율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했다. 노동부문도 노사정위원회를 설치,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 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고 공공부문의 경우, 두차례에 걸친 조직 개편을 통해 핵심역량 위주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였다.

'위기극복 모델 국가' 주목

우리 경제가 이같이 빠른 회복세를 가져온 것은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단합이 뒷받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동남아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캉드쉬 IMF총재가 "한국 경제의 성공은 대통령의 성공"이라는 축하 인사를 한데 대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도 아니다"라며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해외언론들은 현재 한국을 '아시아의 또 다른 기적' '위기 극복의 모델국가'로 주목하고 강한 지도력 및 개혁 노력에 힘입어 예상을 넘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정착시키고 구조개혁의 완성을 통해 21세기 선진경제로의 이행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틀 조기정착,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 창출, 생산적 사회복지체제 구축, 지역균형개발 시책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과 협력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

일부공직자 '옷로비 의혹' 도덕성 회복 계기 삼아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옷로비 의혹사건을 계기로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획기적인 안을 만들어 내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일부 국무위원 부인들의 옷 문제는 국민적 분노를 야기시킨 슬프고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국민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이 많은 공무원 가족들에게 큰 경종을 울렸으며 더 큰 불행을 미연에 방지

국무회의 메모

〈6월 2일〉

하는 경고가 돼야 한다"며 "다시 한번 공직기강, 가족의 몸가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기강을 확립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정부와 각료·공무원 그리고 가족들의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부장관이 러시아·몽골 방문 결과를 보고했고, 이어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 장관은 "러시아의 풍부한 기술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관련 기업들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장 65세 정년 철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65세로 돼 있는 감사원장의 정년규정을 철폐, 헌법상 보장된 4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개정안 등 11건의 안건을 의결, 통과시켰다. ■

특별기고 **국민화합 새 지평 열자**

지역주의 뿌리 뽑아야 국가발전

김 기 재 행정자치부장관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다듬고 고쳐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의 하나가 바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을 실현하는 일이다.

물론 순수한 지역주의는 지역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지역주의는 건전하고 순수한 향토애의 충정을 넘어 다른 지역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라는 부정적 정서로 표출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최근에는 영·호남지역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충청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까지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시·도 안에서조차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지역주의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굴절되고 배타적인 지역갈등 구도는 국가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망국적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 선진국 도약을 기약하고 있는 우리 처지에서 국민화합이야말로 국민역량을 한데 결집하는 요체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화합의 실현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사와 지역개발이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이유도 그렇고, 지역별 투자계획을 정부와 지방간에 협의해 소요예산을 배정하는 이유도 그렇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 배려만으로 금방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온 국민이 관심있게 참여하는 국민화합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먼저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켜 나가면서 이를 민간단체간의 운동과 주민참여의 시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막연한 거부감·부정적 정서 곤란
순수한 향토애는 순기능적 역할
정부, 인사·지역개발 각별히 유의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교류는 98년 10월 전북과 경북을 시작으로 그동안 108개 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운영하는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시·도별 1개 시·군·구를 선정해 '공동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무원 교환근무, 문화·체육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민간단체의 교류사업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남대·경북대간 교환수강제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면, 광주에서 개최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경북도립국악단이 출연해 뜻깊은 국민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새마을·바르게살기단체 등이 상호 교류해 '지역벽 허물기 행사' 등을 마련했고, 대구·경북 기자협회는 광주·전남 기자단을 초청해 '지역감정 해소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부는 그동안 영·호남 지역에 집중됐던 국민화합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중앙 각 부처가 참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단편적이거나 일과성 행사위주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층간·세대간의 화합측면까지 고려해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물론, 이런 모든 시책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그 결실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각계각층 국민과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정부와 더불어 힘을 모아 나아갈 때만이 바라는 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세계 모든 나라가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더 이상 동과 서로 나뉘고 다시 지역과 지역간에 편가름하는 잘못을 거듭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지역갈등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계속해 왔지만 지금처럼 온 국민이 공감하는 가운데 국민화합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모처럼 맞이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 따뜻한 가슴으로 국민화합의 대열에 앞장서 '너'와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다가오는 21세기를 꿈과 희망으로 맞이하자. ■

하반기 인턴사원제 확정

대졸 2만·고졸 1만명에 일자리

채용기업 1인당 50만원씩 6개월 지원

정규직 전환해도 지원금

올 하반기부터 대학졸업자 2만명과 고교졸업자 1만명 등 모두 3만명이 정부지원금을 통해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으로 일자리를 얻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졸 및 고졸 인턴제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은 1인당 50만원(30대 기업은 40만원)씩의 지원금을 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된다.

제2차로 실시하는 이번 대졸인턴제는 특히 인턴사원들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졸 인턴사원을 6개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잔여기간 동안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기업의 효율적인 인턴사원제 운영을 위해 '인턴연수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기간종료후에도 정규채용계획을 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인턴연수 중인 인원의 정규취업 촉진을 위해 6개월 기간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인턴제를 활용하는 기업의 경우 그 5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제2차 사업에 의한 인턴을 신규로 충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부터 고졸 미취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개월간 매월 40만원씩의 지원금이 지원되며, 추후 이들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120만원의 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키로 했다.

출신대학에 신청서 제출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대졸인턴제는 대학 취업담당부서에 우선 신청해 지원대상 인력 풀에 포함돼야 지원이 가능하며, 고졸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1만명 지원규모가 소진될 때까지만 기업체에 채용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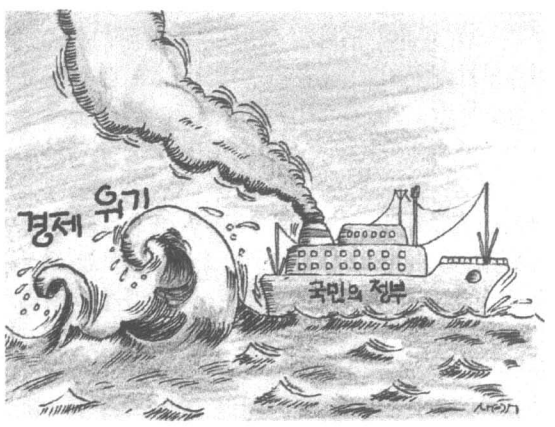
한편 대졸 인턴희망자의 경우 7일부터 19일까지 출신대학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턴사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7일부터 각 대학 취업담당부서에 인턴추천서를 보내야 한다.

인턴을 희망하는 고졸 미취업자는 오는 14일부터 전국 각 지방노동관서에 구인·구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의 배정인원은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벤처기업이나 수출유망기업 등 우수중소기업은 인원배정에 있어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전선주기자〉

국정 漫評



박상익

『IMF 극복 1년6개월』

경제장관 간담회

올 실업자 130만명 수준 축소

4대개혁 철저 점검… 연내 마무리

정부는 금년 말 실업률을 6%대로, 실업자 수를 130만명 수준까지 축소키 위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금년 말까지 내실있게 마무리하는데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재정경제부 대회의실에서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8개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4대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확정했다.

비주력분야 새사업 억제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기업부문 구조개혁 중 5대재벌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핵심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비주력 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기관련 대책은 성장률 상향에 집착하지 않고 내년 이후의 지속적 성장기반이 되는 투자와 수출·기술개발에 주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요 선진국의 경기변화와 국제자금흐름 등 국제경제여건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도록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확정한 4대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 주요 내용.

□4대 경제개혁 추진

△금융구조=서울·제일은행의 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짓는다.

소프트웨어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관련 법률을 정부주도형에서 시장경제형으로 개편하되 규율을 위배하는 시장참여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기업구조=기업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자율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약을 제정하고, 상장법인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영미식의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부실기업의 원활한 퇴출 및 회생가능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퇴출제도를 개선한다.

5대계열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약정 이행을 점검 지원하고, 금융감독기구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이행상황 점검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공공부문구조=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을 본격 추진, 경쟁력과 효율성을 구비한 새 천년에 맞는 시스템을 정립하고, 구조조정과 함께 운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한다.

공기업 민영화, 공공기관 경영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사기진작과 의식개혁 등을 통해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로 적극 동참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물가 연 3%내 기조 정착

△노동시장=노사화합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개혁 등을 추진한다.

우리사주제도 개선과 함께, 직업훈련을 미래 유망직종 등 고부가가치 창출과 고기술·고기능 과정위주로 재편하는 등 중산층 육성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대책

△경기와 실업=성장률이 99년 1분기 중 4.6%를 기록, 상반기 중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기업이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신상품개발·품질향상 및 고급화·수출선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도록 노력한다.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튼튼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 실업률이 금년말까지 6%대(실업자 130만명 수준)로 하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견지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수출기업화 대상인 1,000개 내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마케팅·금융 등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개미군단을 육성하는 등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중장기적인 수출잠재력 강화를 위한 기술과 신상품 개발노력을 강화한다.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유치활동 전개(APEC투자박람회), 구조조정의 착실한 추진 등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생활애로를 해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증액투자를 유도한다.

△물가와 국제수지=공기업 요금조정시 경영혁신이 선행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 조정시기를 분산하는 등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 연평균 3% 이내의 저물가기조를 정착한다.

△국제수지=경기회복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년 중 200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금융시장=신축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금리안정기조를 유지한다. 주식시장의 추세적 상승세를 활용,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한다.

△재정운영=내년부터 세입사정이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적자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 추이와 재정적자 관리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재정을 운영한다.

특별회계·기금정비, 조세체계 간소화 등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한다.

〈강호천기자〉

서민 주거안정 대책

분양중도금 대출금리 9.5%

다가구·다세대 주택 건설자금 지원

이달부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일제히 인하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달 31일 그동안 주택건설 확대를 위해 많은 대책을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최근에는 주택 건설업체에서 중대형 아파트위주로 주택을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기회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12.1평 이하는 7.5% 유지

정부의 주거안정 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전용 12.1평 초과~15.1평 이하의 주택은 연리 8.5%에서 8%로, 15.1초과~18평 이하는 9.5%에서 9.0%로 각각 인하된다. 단 12.1평 이하 주택의 대출금리는 현행 7.5%로 유지된다.

분양 중도금 또한 현행 10%에서 9.5%로, 전세반환자금은 11.5%에서 10%로 각각 낮춰진다.

이외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98년부터 중단됐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도 이달 중순부터 재개되고 지원범위도 넓어진다. 이제까지는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지을 때만 기금이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5.7평까지 확대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원=재건축·재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에게 연리 9.5%로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전체 주택의 5.5% 수준인 임대주택 비율을 2002년까지 10%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올해의 경우 당초 10만가구 건설에서 2만호를 늘린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서민 주거안정대책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정안	상환조건	시행시기
소형주택 건설자금 지원금리	12.1평이하	7.5%	7.5%	1년거치 19년상환	6월중순
	12.1~15.1평	8.5%	8.0%		
	15.1~18.1평	9.5%	9.0%		
중도금대출금리		10.0%	9.5%	3년거치 10년 상환	〃
전세금반환자금지원금리		11.5%	10.0%	1~3년내 상환	〃
중형주택건설자금지원		-	3,000만원, 9.5%	1년거치 19년상환	〃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지원	한 도	가구당 700만원	1,000만원	1~3년내 상환	〃
	금 리	9.5%	9.0%		
	대 상	18.1평이하	25.7평이하		
재개발·재건축 지원		• 재건축-지원없음 • 재개발-2,000만원, 9.5%	• 재건축-2,000만원, 9.5% • 재개발-좌동	3년거치 5년상환	〃
근로자주택 건설지원	대 상	18.1평이하	25.7평이하	5년거치 20년 상환	하반기
	금 리	7.5~9.5%	7.5~9.0%		6월중순
근로자주택 구입 및 전세	한 도	• 구입-1,600만원 • 전세-1,000만원	• 구입-2,000만원 • 전세-1,500만원	• 구입:5년거치 10년상환 • 전세:2년내 상환, 1회 연장 가능	〃
	자 격	1년이상 무주택근무자	무주택근무자		
	금 리	7.0%	7.0%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근로자 주거안정 지원=하반기부터 근로자주택 지원대상이 전용면적 18평에서 25.7평으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주택구입의 경우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대출자격 또한 1년 이상 무주택 근로자에서 현재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된다.

△직장 및 지역조합주택 지원=하반기중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통해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택조합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등 행정지원=지분에 따라 여러 채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조합원 분양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20호 미만 소규모 연립주택도 재건축이 허용된다.

〈홍영모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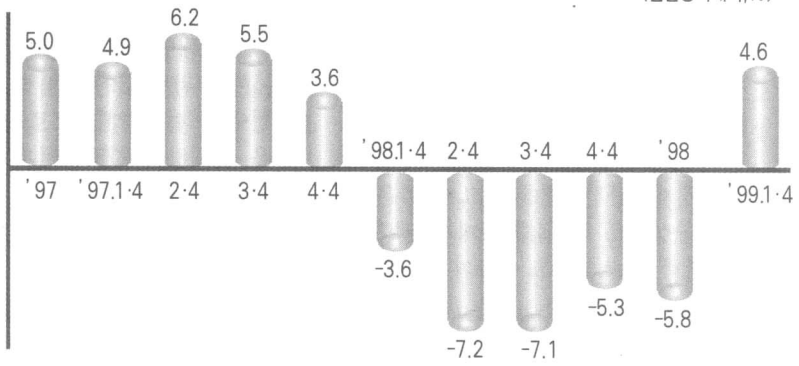
IMF극복 1년6개월 … 그 성과와 과제

일자리 창출 실업자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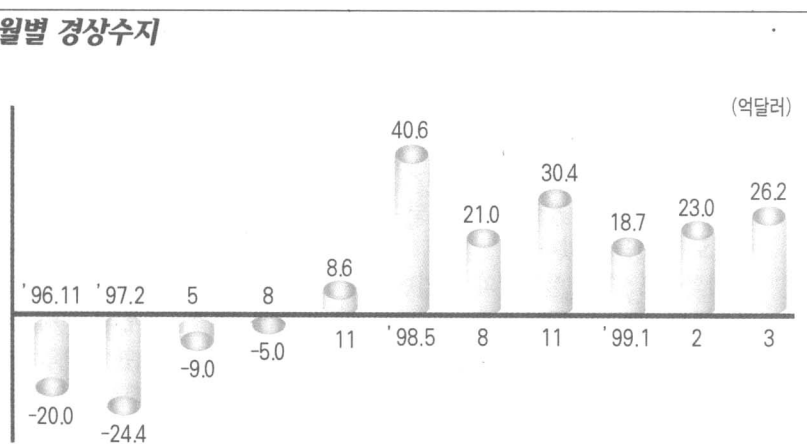
반도체·자동차등 산업생산 증가
외화 유동성 부족률 대폭 해소
중소 벤처기업 지원 창업 촉진
치솟던 물가잡아 연 7.5% 억제

지난 3일로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지 꼭 1년 6개월이 됐다. 외환수급이 촌각을 다투던 97년 12월 기업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도산했으며, 실업자는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물가는 천장부지로 뛰었고, 환율은 2,000원, 금리는 30%를 웃도는 등 6·25전쟁 이래 최악의 국가위기 상태로 치달았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 속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는 1년반 만에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겠다고 확언했다. 그 후 국민의 정부는 사회 전분야에 있어 일대 개혁을 시작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서는 정격유착이나 관치금융, 부정부패는 기필코 근절돼야 한다고 판단, 기업·금융·노동·공공부문 등 4대 구조개혁을 이루는데 총력을 다했다. 또한 기업활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정부의 각종 행정규제 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실업자 구제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나라의 중심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IMF 자금지원 합의서 서명이 있은 지 1년반만에 우리 경제 지표는 놀랍게도 과거의 수치를 거의 회복하고 있다. 환율 1,100원대, 가용외환보유고 574억달러(5월말 현재), 종합주가지수 800선 육박 등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와 실물경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기적적인 위기극복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IMF관리 체제 1년 6개월 동안 정부의 경제개혁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경제성장률 추이



월별 경상수지



◇외환유동성 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IMF·세계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각각 20억달러, 100억달러, 4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했고, 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일본·미국 등 13개국으로부터 233억 5,000만달러를 지원받기로 약속받아 외환시장 조기 안정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지난 98년 1월에는 7개국 13개 외국채권은행 대표단과의 협상을 통해 금융기관 단기외채 만기연장에 대한 기본합의를 얻어냈으며, 4월에는 대상채무 96.7%인 217억4,000만달러가 중장기 외채로 전환돼 국내 외화유동성 부족을 크게 해소했다.

또 국가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아시아 국들의 채권금리 상승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10억달러 많은 40억달러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 국내 금융기관 및 민간기업들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연말 52억달러 추가상환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개방·개혁의지를 천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회복에 노력한 결과 지난 97년 12월18일 39억달러에 불과하던 가용외환보유고는 99년 5월 현재 574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하는 동시에 원화환율은 안정기조를 유지했으며, 외채구조도 빠르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월까지 IMF와의 9차례 협의를 통해 도입예정분 외화 210억달러중 195억달러를 도입 완료했으며, 지난 98년 12월과 지난 5월까지 이미 73억달러를 상환하는 한편 연말까지 52억달러를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회복

9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5.8% 하락했으나 올 1·4분기 중에는 4.6%를 기록, 4개월만에 성장세로 전환됐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산업생산이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는 임금소득 감소에도 불구, 구조조정 진행에 따른 불확실성 및 신용경색 해소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다. 투자는 설비투자가 철도차량 등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은 더 큰 폭으로 감소세를 기록, 경상수지는 최대의 흑자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 수출은 감소, 수입은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무역수지 흑자추세는 계속 이어져 경상수지는 연중 200억달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물가는 환율급등으로 97년 12월 이후 3개월간 6.6%p 상승했으나 23개 주요 생필품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매점매석행위 단속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와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 추진 △소비자물가감시단 구성 등을 통해 98년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7.5%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어 올 1~4월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0.7% 상승하는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구조개혁 추진

금융부문의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해 회생불가능한 금융기관을 퇴출시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으며, 회생가능 금융기관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 높여

기업 구조개혁은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핵심기업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자 책임 강화 등의 5대 원칙에 입각, 기업규모별 특성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특히 5대 계열의 경우 8개 업종의 자율적 사업교환 추진 및 재무구조개선계획 수립, 6~64대 계열은 채권금융기관 주도 아래 기업개선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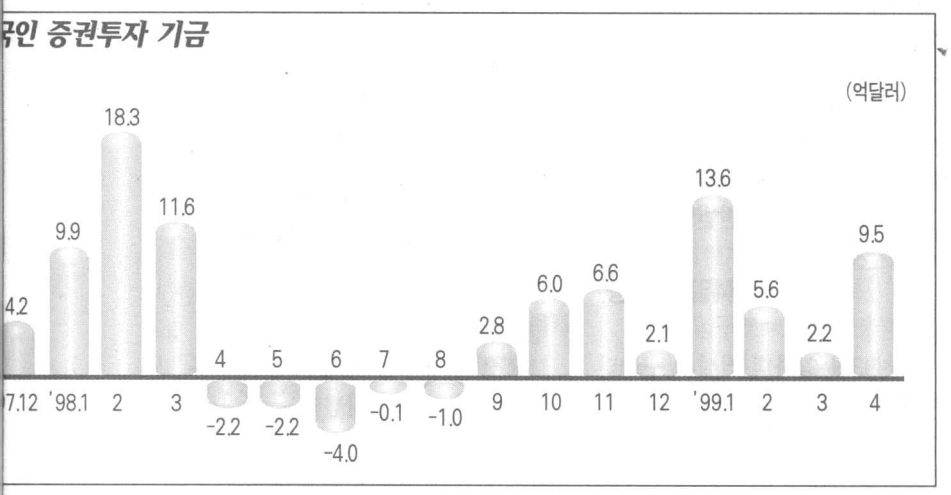
노동부문 구조개혁으로는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 고용조정제와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합의, 입법화했다. 특히 고용조정제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다소의 진통이 있었지만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정착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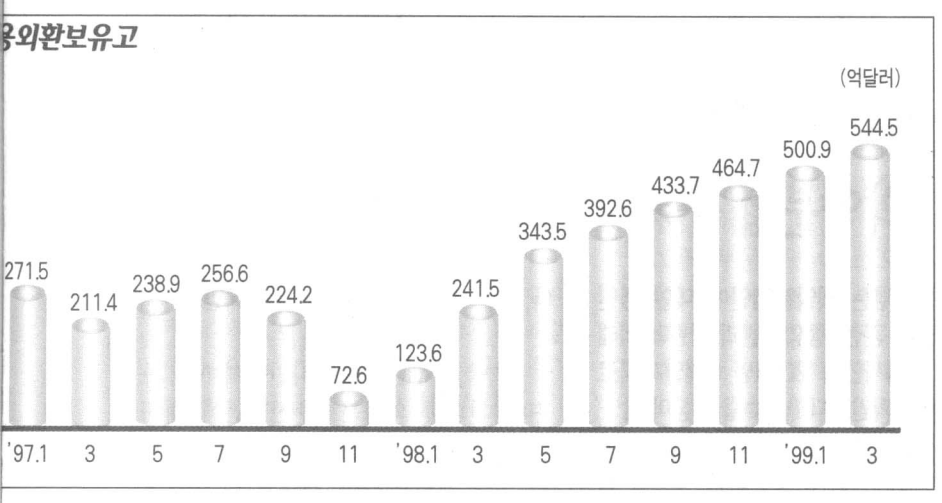
정부는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기능을 재정립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개편했다. 특히 지난해 9월 1단계로 지방정부 조직을 축소하고 2단계로 2002년까지 정원의 20%를 추가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 108개 중 38개 완전민영화, 34개 단계적 민영화, 6개 자회사 통폐합 계획에 따라 99년 3월 현재 연간계획대비 57% 수준의 인원감축을 달성했다. 정부출연·위탁기관은 통폐합 대상 19개 기관 중 13개 기관을 완료하고, 인력감축도 9,867명으로 당초 98년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

이밖에 공공부문의 생산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 1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등 재

0만명 구제





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실업자 구제와 일자리 창출

98년 3월 실업문제종합대책과 8월 하반기 실업대책을 통해 총 10조원 규모의 실업대책을 수립, 집행했다. 그 결과 4월부터 12월까지 총 10조1,000억원의 실업대책비 중 95.6%를 집행, 약 300만명에게 혜택을 부여했다. 올해도 7조7,000억원 규모의 실업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 총 8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확충하고 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직업훈련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부는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용경색에 따른 자금난과 수요위축에 따른 판매난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했다.

우선 자금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98년중 33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했다.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를 3차례에 걸쳐 증액, 총 7조6,000억원 규모로 확충하고 98년중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대출금 등 각종 여신 84조원에 대해 만기를 2개월 이상 연장했다. 아울러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제도적 지원기반을 확충했다.

이러한 지원시책에 따라 98년중 2만3,000개에 달하던 부도업체가 올들어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7대도시 신설 법인수가 부도법인의 10배 수준을 지속하는 등 창업도 활발해지고 있다.

관광·문화사업 중점 육성

◇중산층 보호

IMF 위기 이후 실업증가, 임금 감소, 중소기업 도산,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중산층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산층 육성방안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자영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식·관광·문화산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시책을 펴고 있다.

또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확충 정착시키고,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융자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를 개선,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선주기자〉

국내외 언론의 평가

"아랫목 경기 슬슬 윗목으로"

일본 10년 걸린 은행권정비 2년내 처리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복에 대해 국내외 언론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내언론은 '아랫목 경기 슬슬 윗목으로' 등의 제목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국내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금년 경제성장률을 4% 대로 상향 전망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대부분의 국내언론은 지난 5월 10일 산업생산지수·주가지수·외환보유고 등 40개 주요 경제지표에 대해서도 IMF체제 이전과 비교할 때 15개 지표가 IMF 이전수준을 상회했고, 26개 지표가 90% 수준에 가깝다는 대우경제연구소 발표를 보도했다.

위기발생 직후 국가파산을 우려하던 해외언론들도 한국을 '아시아 경제회복의 선두국가', '아시아의 또다른 기적' 등으로 부르며 '위기극복의 모델국가'로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강한 지도력 및 개혁 노력에 힘입어 예상을 넘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호평이 주류를 이룬 가운데 중단없는 개혁을 주문했다.

해외언론은 또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 파업 등 노동불안과 경기침체를 우려했으나 하반기 들어 미국이 1차 금리인하를 단행한 이후 위기극복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심스럽게 회복을 낙관하기 시작했다.

과잉시설·개혁기피 경계

특히 아시아위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 이후인 4월9일 "일본이 10년에 걸쳐 추진한 은행권 정비를 김 대통령은 2년도 안되는 기간에 처리했다"고 보도하는 등 한국의 강력한 경제개혁 의지를 소개했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 대부분은 최근의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지나치게 확산되면 구조조정 지연 또는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벌의 과잉시설 및 개혁기피, 은행의 부실채권, 막대한 재정적자, 엔화 강세 등 대내외적 위험요소가 많아 지나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개혁지연 및 개혁의지가 후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향후 과제 및 전망

시장감시·사회복지기능 늘려야

최근 경기회복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2% 수준을 훨씬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결실을 맺게 될 경우 우리 경제는 중장기적으로 4~5%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선순환구조로 정착시키고 구조개혁을 완성시키는 한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틀 정착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신노사문화 창출 △생산적인 사회복지체제 구축 △지역균형개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과 협력 방안모색 등의 정책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지식기반 경제 적극 추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틀 정착을 위해서는 IMF 위기의 근본원인이었던 정경유착·관치금융·부정부패 등을 근절하고, 정부의 기능을 시장감시기능과 인프라구축, 사회복지 기능 중심으로 전환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책임성이 보장되는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창의적 기술개발시스템 정립과 신지식인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유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능하다.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제도·의식·관행의 지속적 개선과 유연한 노동시장 구현을 위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고실업률에 대비하고 소외계층을 극소화하기 위한 생산적 사회복지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자활·자립에 기초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행정체계를 선진화·전문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경쟁과 협력을 위해서는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해 지역경제의 안정화와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고, 아시아·중남미 등 개도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경철기자〉

'제일은행에 5조 5,000억 투입'

기본은 해외매각…지원방법 검토 중

제일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한 공적자금이 5조 5,000억원 가량 투입된다. 이같은 공적자금 투입규모는 당초 예상했던 3조원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6월1일자, 매일경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일은행의 해외매각은 계속 추진하되 은행의 정상화를 위해 우선 재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의 지원규모 · 방법과 기존주식의 처리문제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두고 금감위와 함께 검토중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밝힌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지역의보료 인상 재검토'

이미 고지한 보험료와는 상관없어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는 2일 지역의료보험료 대폭 인상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즉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6월2일자, 문화일보〉

2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시한 내용은 '지역의료보험료 인상내용 검토 지시' 일뿐 '이미 고지한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에 대한 재검토'는 아님을 밝힌다.

참고로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장관은 지역의료 보험료 인상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과 사유를 충분히 홍보하고, 의료비 증가억제 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공보관)

'미니 신도시 3곳 추진'

예정위치 · 규모 관계부처 협의 단계

경기도 고양 · 김포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지역 3곳에 각각 20~3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조성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3개 지구 70만평을 6월중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월31일자, 중앙〉

건설교통부는 택지수급 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위치와 규모 등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을 밝힌다.

(건설교통부 택지개발과)

'임하댐 주변 붕괴위험 높다'

성토공사 부실과 댐 안전은 무관

지반붕괴 등으로 안전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경북 안동 임하 다목적댐의 주변지역이 대규모 붕괴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지질공학회는 3일 임하댐을 건설한 수자원공사의 의뢰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임하댐 주변의 지반 안정성을 조사한 '임하댐 주변지역 지반변형 원인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6월4일자, 경향〉

지난 83~93년 임하댐 건설시 수몰민을 위해 조성한 중평이주단지의 지반변형 원인은 성토공사 부실로 댐의 안전과는 무관하다.

임하댐의 안전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미국 전문 안전진단팀(Harza사)이 국내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댐주변의 지질변형의 경우 댐의 안전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수자원공사는 보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한지질공학회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안전조사를 의뢰했으며 여기서도 이같은 사실을 재확인했다.

한편 성토공사 부실 등으로 인한 변형지역중 위리지역의 도로융기는 경북도에서 재시공 완료했으며, 댐상류 4㎞ 지점의 수곡교 교각변형에 대해서는 안동시에서 금년말 준공목표로 보수공사를 시공중에 있음을 밝힌다.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

'종합병원 외래조제실 폐쇄 늦춰'

의약분업 구체적인 방안 결정 안돼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안에 대한 병원들의 반발과 관련, 종합병원과 병원의 외래조제실 폐쇄시한을 2001년 6월말까지로 시민단체 합의안보다 1년 늦출 방침이다.

또 약사를 거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주사제를 확대하고 지방소도시의 보건지소는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월2일자, 한국경제〉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민단체에서 마련해 건의한 의약분업추진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중인 단계로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어떤 방침도 결정한 바 없음을 밝힌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외국 언론이 보는 (한국 · 한국인)

경제호전… 증시 기록갱신 행진 — NYT
재벌 기강 잡아야 건전한 성장 — BW

■ 『신속한 경제회복이 금융개혁 노력 방해』
(1일자, 미국 · 뉴욕 타임스)

외자와 전문기술을 유치하여 불안한 금융체제를 개혁하려는 한국의 노력이 다른 것도 아닌 눈부신 경제회복 때문에 궁지에 빠졌다. 5월3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HSBC의 서울은행 인수협상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협상의 어려움은 한국에 확산돼 있는 낙관적인 뉴스들과 큰 대조를 보임으로써 경제붕괴의 위기감이 수그러지고 있는 현 시점에 정부의 개혁지속의지의 시험대로 등장하고 있다.

금감위는 뉴브리지 캐피탈과의 제일은행 매각협상을 세번이나 연장했었다.

서울 · 제일 두 은행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조건에 따라 국책은행이 됐다. 그 후 상황은 눈에 띄게 변했다. 지금 한국경제는 기대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고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정부의 개혁노력을 인정함에 따라 증시는 환란 이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감 부재는 퇴보로 간주할 수 있다. 옛 경영방식을 바꾸려는 의욕을 계속 갖는 것이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모든 나라에게 매우 중요하다. 치유가 어려워 보이는 일본경제가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한국과 아시아 전역의 최대 당면과제"라고 로스차일드사의 윌버 로스 연구원은 말했다.

■ 『한국, 빨리 회복할까』
(7일자, 미국 · 비즈니스 위크)

작년에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5.8%의 성장을 기록했고 노사분규가 창궐했으며 서울 곳곳에 무료 급식소가 생겼다. 재벌이 엄청난 빚더미에 깔려 침몰함에 따라 경제적 고통이 여러해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올들어 주가는 25% 급등했고 2월에 8.7%였던 실업률은 7.2%로 감소했다. 1 · 4분기 성장률 4.6%에 회의론자들은 어리둥절해 있다. 한국은 V자형 회복에 들어간 것인가?

한국경제가 경기회복이 진행 중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장률이 부양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환란이 시작된 이후 한국은 부실 금융부문에 약 360억달러를 지원해 신인도와 안정을 되찾았다. 앞으로 인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등의 프로젝트에 275억달러의 추가 자금이 투입될 것이다.

내수가 증가하지만 재정적자가 이미 GDP의 약 5%를 차지하기 때문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더 이상 지원할 형편이 아니다. 문어발식 재벌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느냐 여부에 건전한 성장이 달려있다.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총재와 로렌스 서머스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가 재벌을 굴복시키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믿어진다.

상당수 재벌들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반발하는 재벌들이 또 다시 시장붕괴를 촉발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잘못된 체제를 그대로 둔다면 경제회복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최근 개각에서 김 대통령의 재벌 구조조정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지원: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지자체 '98 예산 대폭 절감

서울 송파구 매립비용 14억 줄여

모두 2조2,300여억원 … 사례 다양

청주의료원 첫 흑자경영

지난해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예산절감 시책을 추진, 총 2조2,300여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 발간한 '98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사례집'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경우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관광안내소 등 51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2억5,700만원을 예산을 절감했다. 충청북도는 매년 5~1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던 청주의료원의 경영구조를 개선, 인원 40명 감축과 팀제 도입을 통한 환자위주의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6억5,200만원의 흑자를 냈다.

서울 송파구는 또 한강 둔치에 쌓이는 퇴적토를 조경용 흙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그동안 김포매립지로의 운반, 매립에 의한 소용비용 14억200만원을 절감했으며, 경기도 구리시는 음식물 찌꺼기를 청둥오리의 사료로 사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7,000만원을 아끼고 청둥오리 및 오리알을 판매해 2,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부산시는 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 조명자동제어시스템 가동, 세면장 수온조절 등을 시행함으로써 9억2,400만원을 절약하는 한편 98년도 전국 최초 건물부문 에너지절약마크를 획득하기로 했다.

〈홍영모기자〉

DB소재 안내서비스 개시

행정정보 1,000여종 안방서 본다

정부간행물 서지정보도 인터넷 제공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000여종의 행정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소재안내 서비스가 개시됐다.

소재안내 서비스란 일명 GILS(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로 불리며, 이는 일반 국민들이 정부기관에서 구축·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해 원하는 정보를 검색, 획득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등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업.

행정자치부가 지난 5월31일부터 개시한 소재안내 서비스 대상은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16개 시·도 및 14개 시·도교육청 등 68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여종의 데이터 베이스다. 이곳에서 소재 안내되는 내용은 정보화 일 구성항목, 정보화일 내용의 제공가능 여부 등 20개 항목이다.

정부대표 홈페이지 이용

이로써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알권리를 안방에서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이용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정부대표 홈페이지(www.gcc.go.kr)에 접속, 전체 메뉴화면에서 '행정정보소재안내'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한편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는 GILS를 통해 92년부터 98년까지 7년동안 발간한 정부간행물 서지정보 약 3만여건을 서비스하고 있다.

〈홍영모기자〉

한마디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아쉽다

김 덕 우
환경부 환경경제과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가올 21세기에는 대량생산 위주의 산업보다는 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 및 생산·소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은 현상은 20세기 산업발전을 주도해 온 비환경적인 대량생산·대량소비 구조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파괴의 심각성을 더해 가는 지구환경을 살리고 보전하기 위해 제품생산 및 소비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재 지구환경보호 수단의 일환으로 세계표준화기구(ISO)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평가·인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라벨링 국제표준화규격(ISO14020s)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벨링 국제표준화 추진

ISO의 환경라벨링제도는 제품 및 재료의 환경성 정보전달수단이며, 이러한 제품의 환경성 정보는 소비자에게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심리를 유인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생산·소비체제의 구축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예방 환경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환경라벨링을 무역과 연계하려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어 환경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의 경우 수출과정에서 비관세무역장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그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ISO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라벨링 작업을 적극 수용해 92년부터 환경성기준에 합당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환경마크제도(ISO14024)와 제품 생산자 스스로 제품의 환경성을 홍보하는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는 환경성 자기주장제도(ISO14021)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환경성적 표지제도 도입

또한 환경부는 제품의 환경성 증진과 ISO, WTO 등 국제적 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98년 5월 제품의 환경성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제도운영방법과 각종 지침 등을 개발중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될 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현재 시행중인 환경마크제도와 환경성 자기주장제도와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환경친화적 제품의 생산·소비구조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위기로까지 치닫는 지구의 환경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수단이 도입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생산자·소비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환경보호 의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에 앞서 국민 모두가 자신은 이 지구의 환경문제를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

한·양방 협진 치료

암·간장질환·알레르기 등 기초모델 84가지 효과 소개

신지식인 17

최 서 영씨
〈하나한방병원 원장〉

10년 전만 해도 한의와 양의는 서로 융화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로 생각됐다. 치료 가능한 질환이 서로 다르고 각자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을 깬 사람이 있다. 92년 국내 최초로 한·양방 협진을 위해 세운 하나한방병원. 하나의원의 최서영 원장은 동서의학의 화학적 결합으로 암·간장질환·알레르기·노인질환 등과 같은 난치성 질환이 한·양방 협진으로 치료 가능함을 입증했다.

"한의와 양의의 협진은 한국의학을 세계의학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최 원장이 실천하는 한·양방 협진은 단순히 한의사와 양의사가 같이 진료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협진의 목적은 두 의학의 치료 장점들을 모아 새로운 의학적 방법을 개발, 최선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도출하는데 있다.

처음 최 원장이 한·양방 협진을 추진할 당시 동료와 선배 한의사들은 '정신나간 친구'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망해도 해야 한다"라는 최 원장의 결심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다.

최 원장이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협진 의료의 성공적인 임상적용이었다. 양의학으로 진단·치료가 안되는 부분은 한의학으로, 한의학에서 안되는 부분은 양의학에서 보완하고, 질병의 성질과 완급에 따라 두 의학이 분담할 부분을 정하는 새로운 의료지침을 세워 만성·악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임상실험에 대부분의 시간과 역량을 할애했다.

그 결과 중풍·치매·간장질환·관절질환·알레르기·암·노인질환과 같은 난치성 환자들이 뚜렷한 치료효과를 냈으며,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각종 질환에 대해 협진의 기초적 모델 84가지가 작성됐고 학계에도 소개됐다.

최 원장은 협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한·양방 협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신약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도처의 환자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우리 나라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같은 협진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복지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선경철기자〉

종합청사게시판

보안 포스터 · 표어 선정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안 포스터 및 표어 공모' 당선작 10점을 선정했다.

표어 당선작에는 △눈길마다 보안확인 손길마다 보안점검 △웃음속에 흘린보안 눈물되어 돌아온다 △생활속의 보안의식 다져지는 국가안보 △한잔술로 나눈정담 흔들리는 국가안보 △정보사용 올바르게 보안관리 철저하게 등 5편이며, 포스터 당선작은 △작은 정보, 큰도둑〈사진〉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라의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보안가는데 안보간다 △빈틈없는 보안으로 안전한 국가를 등 5개 작품이다.

거동수상자 신고 홍보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우리 주변의 각종 재난과 범죄 등 사회불안요소에 대한 신고를 생활화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국민 신고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신고대상은 간첩 · 거동수상자 · 밀입국선박 · 불온선전물, 각종 재난, 환경오염 및 민생치안사범 등이며, 신고는 전화 · 서면 · 직접방문 등을 이용하면 된다. 간첩 · 거동수상자는 112, 113 또는 080-999-1113, 화재 · 응급환자발생시는 119, 각종 민생치안사범 신고는 112, 재난위험요소 발견시는 119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민속음악대제전' 개최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은 민속음악대제전 '홍과 신명으로 풀어가는 예술-사물놀이'를 오는 10~11일 오후 7시 30분 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영남지방의 '영남가락'과 호남지방의 '호남우도굿' 등을 통해 각 풍물의 지역별 · 악기별 특성을 보여주며, 상쇠놀이와 상모놀이를 결합한 '판굿', 가죽 · 나무 · 쇠 등 세 물질의 소리가 어우러진 '모듬북놀이' 등의 공연이 마련된다. 문의 02)580-3300~3.

전자우편 서비스지역 확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는 현재 105개 대도시 주요 우체국에서 실시중인 전자우편서비스를 1일부터 전국 225개 우체국으로 확대 실시한다.

전자우편서비스는 이용자가 편지의 내용문과 주소록을 디스켓에 담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편 전산망을 통해 해당 우체국으로 자료를 전송, 우편내용을 출력해 수신인에게 배달하는 제도로 동창회 및 동아리 모임안내, 개업안내, 청첩장 등에 주로 이용된다.

이 서비스는 PC통신 천리안 · 나우누리(go postmai), 하이텔 · 유니텔(go post)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PC통신요금과 함께 부과된다. 문의 02)750-2223.

지자체 소식

임진강변 안보 · 관광파크 건설

〈경기〉 경기도와 파주시는 비무장지대(DMZ) 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의 하나로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를 포함한 임진강변 일대 46만8,000평에 오는 2001년까지 '세계 청소년 생태·안보·관광파크'를 조성키로 했다.

도가 마련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이 곳에는 △청소년 수련원 · 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 △세계 민속관 · 공연장 등 문화시설 △전쟁종식 기념관 · 평화의 공원 등 안보관광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경기도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공 · 민영 합동으로 개발하고, 안보 · 관광 · 기타 시설은 민자 및 외자를 유치해 개발할 방침이다.

관광엑스포 성공 다짐 '99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10일 남겨놓은 3일 속초시청 직원들이 대회의 성공개최 다짐대회를 시청광장에서 가졌다.

유럽과 패션·제직기술 교류 추진

〈경북〉 경상북도는 전국 최대의 섬유산지인 경북섬유산업을 수출주도 산업으로 육성,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자매결연을 맺은 프랑스 알자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유럽국가를 대상으로 패션 · 제직 · 염색 관련 기술교류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를 중심으로 관련업체 및 학계가 공동 참여하는 선진기술교류를 위해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국내 섬유연구소와 프랑스 ITF연구소간의 교류사업, 영남대학교와 뮐루즈대학간의 연구교류사업 등을 갖게 되며, 9월중에는 각 공정별 기술지도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섬유원지 등 개발에 민자유치

〈강원〉 강원도 동해시가 지역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민간투자 유치에 나섰다.

동해시는 지난 4월 민간투자상담에서 사업추진까지 종합적인 행정을 전담 지원하는 투자유치기획단을 발족, 민간자본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접근도로망 · 산업기반시설 · 지원시설 등 일반현황을 담은 투자안내서를 제작해 30대 기업과 연고기업, 국내외 출향인사들에게 발송했다.

이 투자안내서에는 동해시가 민간자본을 유치, 개발하려는 한섬유원지 · 무릉계곡 관광지 · 추암근린공원 등 7개 주요사업 계획이 수록돼 있다.

동해시는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영어와 일어판 투자안내서를 추가로 제작하는 한편 이달부터는 투자유치단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 투자상담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키로 했다.

특수부대출신 민간 구조대 창설

〈대전〉 대전광역시는 민간자율 구조대를 창설한다.

시는 이를 위해 100명 정도의 희망자를 신청받아 이달 중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구조대원 자격은 해병대 · 공수부대 등 특수부대 출신으로 구조훈련 이수자 및 구조활동 경력자로 50세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는 구조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난구조반 · 재난구조반 · 장비반 · 구급반 등 4개 반으로 편성, 재해발생 등 민간구조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방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각종 구조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지원서 접수는 시 건설관리과(042-250-3613) 또는 각 구청 건설과로 하면 된다.

진주시 역사 테마공원 조성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는 지난 91년부터 계속 추진중인 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남강변 완충녹지에 시대별 시 역사를 상징하는 테마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진주시의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01년까지 남강변 완충녹지 3만 600m²에 시 역사를 태고, 중세, 근 · 현대, 미래 등 시기별로 나눠 조성하게 된다.

천수교 주변 '남가람마당'에는 진주 천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야외무대 등을 설치해 각종 공연과 결혼식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중세를 나타내는 '의병의 거리'는 물물교환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향토수종인 느티나무로 둘러싸인 '논개의 마당'도 설치할 예정이다.

진주교 주변에는 진주의 미래를 상징하는 '진주마당'을 조성, 시 로고를 중심으로 한 상징공원이 들어선다.

도내 첫 치매전문병원 문열어

〈전남〉 전라남도 광양시에 도내 첫 치매 전문치료 및 요양병원이 개원됐다.

광양시는 6일 보건복지부의 전국 1개 시 · 도 1개 치매환자 요양 및 치료기관 설립방침에 따라 지난 97년 12월 국비와 지방비 37억6,000만원을 들여 착공한 '공립 광양치매전문 요양병원'을 완공, 개원식을 가졌다.

광양시 마동에 위치한 이 병원은 4100m²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3,286m² 규모로 진료실과 76개 병실 · 주차장 ·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공공채널 K-TV

(케이블TV 채널14)

◆오늘의 국정(오전 11시)
△서민 주거안정 대책(8일) △환경친화제품 구매활성화 방안(9일) △'99 지방세법 개정(10일)

◆CH14 초대석
(8일, 오후 12시20분)
△푸른눈 교수가 본 한국 · 한국인:박노자 경희대 교수

◆황수관의 신바람건강
(오전 10시40분)
△TV 진료실:신장질환(9일) △생활 클리닉:신장질환(11일)

◆정보파노라마(오후 3시)
△생활정보:건강한 치아유지법(8일) △법과 생활:직장내 성희롱(10일) △우리는 한가족:맑고 깨끗한 거울로 수출장벽을 넘는다 (주)보우미거울(12일)

◆IMF와 우리 경제(오후 1시50분)
△달라진 그린벨트 법안(9일) △부동산 뮤추얼펀드(11일)

◆CH14 문화마당
(10일, 오후 11시10분)
△현장탐방:영화 '댄스 댄스' 촬영현장

◆특집(11일, 오전 11시)
△의료보험 통합대책(Ⅱ):의료보험 통합의 당위성과 기대효과

◆문예중계실(13일, 오전 1시)
△야외공연:임학성의 팝 피아노콘서트

◆테마실버광장(13일, 오후 5시)
△No(노)! 노세대의 컴도사 선언!

◆우리 것을 찾아서
(13일, 오후 7시10분)
△인정을 사고파는 곳:재래장터